

“축산원자재 부가세 영세율 꼭 적용해야 한다”

—농발위, 김대통령에게 농정개혁안 최종 보고

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촌 발전위원회(위원장: 김범일)는 축산원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사료원료의 관세 무세화가 꼭 필요하다고 김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했다.

농발위는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농발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농어촌 현지 여론수렴,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의견청취, 약 60여회의 내부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“농정개혁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대책”을 김영삼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다.

이날 보고된 개혁안중 축산분야 내용은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비 절감이 관건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▲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수입 사료곡물 관세의 무세화 ▲경영규모 확대와 계열화를 통하여 가격경쟁력 제고 ▲한우개량단지 지원 확대를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원가 절감 ▲중축개량과 보급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.

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폐수에 대해 축산환경오염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해서는 ▲축산단지

의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시설자금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▲축산분뇨의 유기질비료 자원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.

보고서는 또한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▲대도시 생축 반입 및 도축 금지와 도축장의 산지 이전에 필요한 토지 제공 및 현대화 지원 ▲양축가 또는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(도시 직판장 등) 지원과 이를 통한 수입축산물과의 품질차별화 추진 ▲송아지와 육류의 가격안정제도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건의했다.

농발위는 농어촌 환경보전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영세 축산농가 밀집 지역 및 상수원 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며 오염물질의 재활용을 위해 가축분뇨의 고급퇴비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.

그리고 환경보전형 농업을 지원, 오염의 사전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 생산 등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·보급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.

이밖에 농발위는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농지제도 및 양정제도 유통 및 가격정책의 개선, 기술개발과 보급, 농어업인력 육성, 협동조합 개혁, 축산업을 비롯한 임업·수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으며 농어촌 산업진흥 분야에서 도농통합적 생활권 개발, 사회간접자본의 확충, 조건불리지역의 종합개발, 농어촌환경보전대책 등을 보고했다.

농발위는 또 농어민 복지증진 분야에서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,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과 통합의료보험 실시, 국민연금 확대 및 농어업 경영이양장려금 제도 실시, 농어업 산재 및 농작물 재해대책, 농어민단체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.

정부는 농발위가 제출한 농정개혁안을 참고하여 6월까지 농어촌발전대책안을 마련 김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.

그러나 농어민연금제, 의료보험통합, 축산원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농정 핵심사안에 있어 부처간 이견이 심해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며, 김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맡겨질 공간이 크다.